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29(금) ~ 2022.9.1(목)

제공일시 2022 09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29(금) ~ 2022.9.1(목)

제공일시 2022 09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도 '원자재법' 추진...배터리업계 '탈중국 공급망' 시급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유럽에서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원자재법(RMA) 도입을 추진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역내 자원생산 및 중요 원자재 공급망 협상력 강화를 위한 RMA 도입 추진을 밝혔음
- EU는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 코발트, 풍력발전용 영구자석 등 중국의존도가 높아, 그 대안으로 △유럽 내 광물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투자 △공급망 다변화 등을 고려하고 있음
- 국내 배터리 업계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제력국가로 할지 광물 생산지로 할지 해당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2022.08.28) 최민경 기자

2. EU, 원자재 채굴·생산 규제 줄인다

-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풍력발전·태양전지판·전기차에 필요한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원자재의 채굴과 생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채굴 허가를 신속히 내리기 위해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거나 허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관장하는 기관(One-stop shop) 설립 등이 거론되고 있음
- 현재 EU 집행위는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원자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중이며 2030년 EU 발전량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기존 목표를 45%까지 확대했음
- EU 집행위에 따르면 2030년까지 풍력 터빈용 희토류에 대한 EU의 수요는 5배로 늘어나지만, 전 세계 공급량은 2배 증가하는 데 불과함

(매일경제, 2022.08.31) 최현재 기자

3. EU 에너지장관회의 9월 9일 개최... 가격상한제·구조개혁 등 논의

- 유럽 국가들이 올해 겨울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맞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 유럽연합(EU) 에너지 관련 장관들은 다음 달 9일 모여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해 회의를 할 예정임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2022.08.30) 최윤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08.30) 송경재 기자

(한겨레, 2022.08.30) 노지원 기자

1. 텍사스 이어 이번엔 플로리다 2280억 달러 주연기금 ESG 투자금지

- 론 드 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플로리다의 2280억 연기금의 펀드매너저들은 더 이상 투자과정에 ESG를 포함시킬 수 없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새로운 결의안에 따르면, 투자결정은 '금전적인 요인' 또는 투자위험과 수익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만 근거해야 하고, 이러한 요소에는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또 결의안은 대리투표 활동에서도 비금전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함
- 이번 움직임은 텍사스가 지난 주 블랙록, 크레딧스위스, UBS 등 10개의 자산운용사 명단을 ESG 이유로 투자기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와서 ESG의 정치화가 어떤 파장을 갖고올지 주목해야 함

(ESGToday, 2022.08.26) Mark Segal 기자

2. 韓-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도입 단계부터 정보 공유키로

- 환경부는 유럽연합(EU) 측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EU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범 도입 단계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음
- 환경부에 따르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회의에서 프랑스 티머만 EU 그린딜 집행부위원장과 순환경제와 녹색분류체계 등 양국의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알렸음
- 한 장관은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총 3번의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세계가 당면한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했음
- 또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치우스 EU 환경해양수산위원과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망과 공조방안을 논의했음

(뉴스1, 2022.09.01) 나혜윤 기자

3. 독일과 덴마크, 에너지 자립목표를 위한 해상풍력 에너지섬 추진

- 독일과 덴마크는 보른홀름 에너지 섬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 에너지섬은 300만 가구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임
- 발트해에 위치한 이 섬은 독일과 덴마크의 공동 프로젝트로, 2030년에 시운전을 할 계획인데, 덴마크에서는 북해에 또다른 에너지섬을 개발하고 있어 2번째에 해당함
- 이 섬은 470킬로미터 해저케이블로 독일과 연결되며 2030년부터 매년 350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음
- 유럽에서는 국가간 재생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및 덴마크는 최근 '북해중심 해상풍력 협정'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6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150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ESGToday, 2022.08.29) Mark Segal 기자

1. 카타르 “세계 최대 ‘친환경’ 암모니아 공장 건설”

-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 암모니아 공장을 건설하는 ‘암모니아-7(Ammonia-7)’ 프로젝트(10억6천만 달러(한화 약 1조4천억원) 규모)를 추진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매년 ‘블루 암모니아’ 1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이르면 2026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암모니아는 비료나 화학 물질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지만 연소될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발전용 등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도 주목받고 있음
- 기존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와 공기 중 질소를 혼합해 만들기에,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반면, 블루암모니아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음

(연합뉴스, 2022.09.01) 유한주 기자

2. 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장 열린다… “재활용 정립·산단 연계 필수”

- 페비닐과 폐플라스틱에서 추출한 열분해유를 플라스틱 원료인 납사(나프타)로 재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시장이 열릴 것으로 관측됨
-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현재 생산된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연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열분해 사업 신규 참여 기업 증가로 인해 고품질 원료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적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순환경제 내 재활용 지위를 정립하고,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 등 정책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음

(머니투데이, 2022.08.31) 김훈남 기자

3. EU, 합성연료 탄소저감 효과 인정할까

- 유럽연합이 합성연료(E-퓨얼)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인정할 것으로 보임
- EU 재생에너지지침 2차 개정 초안에 따르면 합성연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약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최근 EU 위원회는 2025년 내 발간 예정인 도로분야 무공해차 전환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합성연료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하고 검토하기로 함
- 만약 재검토된다면, 내연기관차가 탄소중립 합성연료를 사용할 경우, EU가 제한한 2035년 이후에도 신차 등록을 허용할 수도 있음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9일 ‘최근 EU 내연기관차 규제와 E-퓨얼 위상’ 보고서를 통해 “향후 3년이 E-퓨얼 등 합성 연료에 대한 EU 방침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내 관련 정책에 EU의 에너지 법제 동향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음

(오토타임즈, 2022.08.30) 구기성 기자

1. 에퀴노르, 윈터셀 다(Wintershall Daa) 대규모 CCS 프로젝트 협업

- 에퀴노르와 윈터셀 다는 독일의 산업용 CO2배출과 노르웨이 대륙붕의 CCS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탄소포획 및 저장 가치사슬을 개발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음
- 이는 일명 ‘노르웨이-독일 CCS(NOR-GE)’ 프로젝트로서, 연간 2000만~4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간 독일 산업배출량의 20%에 해당됨
- 이 프로젝트는 900킬로미터의 개방 파이프라인을 통해 독일의 이산화탄소 수집 허브와 노르웨이의 저장고를 연결할 예정임
- 두 회사는 2032년까지 이 프로젝트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안 CO2 스토리지 라이선스를 공동 신청, 노르웨이 대륙붕에 연간 1500만-2000만톤을 저장할 예정임

(ESGToday, 2022.08.31) Mark Segal 기자

2. 중국 시노펙, 최초 탄소 포집, 저장 시설 시작, 2025년까지 2개 계획

- 중국 시노펙이 중국 최대 규모의 CCUS 시설을 가동하고 2025년까지 같은 규모의 공장을 2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시노펙은 2030년의 중국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CCUS 시범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국기업 중 한곳으로 1년여 전에 착공된 CCUS프로젝트는 산둥성 동부의 시노펙 치루 정유소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수소 제조공정에서 채취, 인근 선리 유전의 73개 유정에 주입할 예정임
- 시노펙은 향후 15년간 1068만톤의 이산화탄소가 유전으로 유입돼 원유 생산량이 300만톤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 또 현재 정유소의 CO2는 트럭으로 운반되고 있지만 시노펙은 연말까지 송유관을 완성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CO2를 옮길 것이며 앞으로 향후 인근 화동유전, 장쑤 유저에도 또다른 2개의 시범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Reuters, 2022.08.29) Chen Aizhu 기자

3. 기후재난, ‘물의 습격’... 2050년까지 홍수·가뭄·태풍 피해 7500조원

- 유럽과 중국 등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고 파키스탄은 최악의 홍수로 1천명 이상이 희생되는 등 지구촌이 물 관련 재해로 고통받는 가운데, 올해부터 2050년까지 물 관련 재해 누적 피해액이 5조6천억 달러(약 755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공학·환경 컨설팅 기업 ‘지에이치디(GHD)’는 29일, 가뭄·홍수·폭풍 등 물 관련 재해의 피해액이 해가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 전망함
- 보고서는 ‘제조업은 물이 부족할 때 생산 차질이 생기고 홍수와 폭풍은 건물과 장비 등 자산 피해를 유발하므로 생필품 업종과 유통(1조1040억달러), 금융과 보험(5140억달러), 농업(3320억달러), 에너지와 수도·전기 등의 기반시설(2370억달러) 순으로 피해가 클 것이라고 관측함

(한겨레, 2022.08.30) 신기섭 기자

4.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시장조성·투자회사 중개기능 확대 필요

-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 빈곤 극복과 가격 효율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성기능과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기능을 대폭 확대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 거래 부진 외에도 유상할당 확대 기초, 상쇄배출권정책 122), 국가감축목표(NDC) 상향 등의 정책 리스크에 의한 높은 가격 변동성이 배출권 유통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자 부족은 거래 부진은 물론, 탄소 감축 전략을 짜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에서 탄소 한 단위 배출에 따른 탄소가격 비용정보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함
- 이에 더해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기능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선물시장 도입을 통해 위험을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함

(에너지데일리, 2022.08.30) 조남준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8.29(금) ~ 2022.9.1(목)

제공일시 2022 09 0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저스티스(Justice) 40, 기후 기술 투자 이익을 지역사회 투자한다

-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Justice 40 Initiative)'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JJA) 시행되면서 미국 내 도시가 다양한 기후 기술 투자 기반이 갖춰졌다고 지난달 4일 WRI(World Resources Institute)가 분석함
- 취임 초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 기후위기 타개(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행정명령(EO) 14008호에 서명함.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에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을 포함해 기후 기술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린비즈는 예측함. 미국 특허청(USPTO)에선 지난 6월 기후 변화 완화 파일럿 프로그램(CCMPP)으로 EO14008을 지원하는 반면 일각에선 기후 기술 특허 출원이 비윤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옴
- USPTO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CCMPP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혁신에 기여하는 기술 특허 출원 심사를 가속화해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됨. CCMPP는 기후 기술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한다는 목표이며, 미국 특허를 취득하면 기술의 지적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지분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EO 14008은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 출범으로 이어졌으며, 저스티스 40은 기후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얻는 이익의 40%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투입한다는 접근법을 근간으로 함
- 저스티스 40의 목표는 소외된 사회의 인프라 정비와 불평등 해소를 겨냥함. 기후 변화 완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청정 교통, 지속가능한 주택, 인력 개발, 수자원 보호, 폐수 처리 등에 투자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임
- 저스티스 40의 목표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JJA)의 방향과 일치함.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얻어 법률로 제정됐으며, 수십 년간 투자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지역사회에 커다란 자금줄이 될 것으로 WRI는 기대함
- IJJA법안 통과 이후 6개월간 50개 주에서는 약 4300개 프로젝트에 1100억달러(약 150조원)가량이 투입됨. 바이든 행정부는 저스티스 40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책정했고, 올해 6월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저스티스 40과 연계할 얼리 어답터 프로그램(Early-Adapter Program)을 발표함. 이 지침에는 소외된 사회의 정의, 대상 프로그램, 혜택 분배 방법, 결과 제공과 측정 방법 등이 나와있음
-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JJA)에 따르면, 미 연방 자금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도시는 자금 운용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함. 소외된 지역사회에 어떻게 활용될 지, 지역의 인구 통계 및 해결과제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함. WRI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를 이해하고 적용방안을 조정하려면, 정량적 데이터 평가와 정성적 지역사회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일단 재원이 투입된 이후부터는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됨. 데이터를 활용한 추적 프로세스와 최근 환경품질위원회(CEQ, Council on Environment Quality)에서 출시한 '기후 및 경제 정의 선별 도구(CEJST)' 등의 수단이 필요함
- 블룸버그 필란트로피의 미국도시 기후챌린지(American Citys Climate Challenge)의 파트너인 WRI는 참여도시의 관계자들과 협력, 향후 연방 자금 조달에 관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파악하고 있음. 지난 4월 WRI는 기후 변화 챌린지에 참여한 7개 도시들은 토론회에선 "프로젝트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의 요구가 무엇인지, 연방 정부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관해 논의함

(인팩트는, 2022.08.29) 양윤혁 기자

(인팩트는, 2022.09.02) 양윤혁 기자

- WRI는 "도시 기후 전략의 핵심 요소는 형평성"이라며 "수요 평가에 참여하는 각 도시는 기후 행동 계획과 형평성, 환경·사회·인종 정의를 통합한다"고 밝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연방 기금 탐색 및 신청 ▲기존 계획과 자금 조달 기회의 연결 ▲자금 투입 효과의 극대화** 라는 3가지 과제가 도출됨
- 먼저, 연방의 자금 수급 기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드러남.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면, 환경 영향 평가나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프로젝트 신청에 필요한 활동을 완료하기 위한 시간 확보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임
- 신청 이후 단계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과정도 난관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WRI는 조언함. 연방 차원에서 도시의 기존 계획을 저스티스 40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검토됨
- 마지막으로 도시는 자금이 가장 소외되고 오염된 지역사회에 우선 투입되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WRI에 따르면 도시는 대부분 포괄적인 계획과 지역의 인구 통계 파악을 위한 데이터 평가를 수행함. 한편 도시는 저스티스 40에 맞는 형평성 측정 데이터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저스티스 40의 지침에 도시의 데이터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임
- 저스티스 40의 영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WRI는 예측함. 자원 확보를 위한 준비 수준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미래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WRI는 조언함